

3분기 가계빚 900조 사상 최대

가계대출 억제영향 보험사 대출 3조원 급증

보험사 대출이 크게 늘어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내놓은 '3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역대 최고치인 892조5000억원이다. 가계신용은 전 분기보다 16조2000억원 늘었지만 2분기 증가액(18조9000억원)보다는 적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을 합한 수치다.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14조9000억원 늘어난 840조9000억원, 판매신용은 1조3000억원 증가한 51조5000억원이다.

가계대출 중 예금은행 대출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은 5조4000억원 증가한 449조6000억원, 179조원

이다. 예금은행 대출 증가폭은 전분기(9조2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됐다. 그러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증가폭은 전분기(6조4000억원)와 비슷했다.

예금취급기관 대출 중 비수도권 대출이 4조8496억원 늘어 수도권 대출 증가액(5조9071억원)에 버금갔다. 이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타금융기관 대출은 4조2000억원 늘어 212조3000억원에 달했다. 전분기(2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진 것이다. 특히 보험사 대출은 전분기 5000억원, 3분기에는 3조원이나 급증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영향으로 은행권 대출이 힘들어지자 보험 약관대출 등으로 수요자가 몰린

결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보험사 대출 증가액의 50% 가량이 보험 약관대출이다.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 용도로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가계신용통계 개선에 따른 신계열 통계자료를 2002년 말까지 소급해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2002년 말 가계신용은 464조6693억원이다. 올해 3분기 말 가계신용이 892조5000억원이라는 점에서 9년도 못돼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셈이다.

한은은 가계신용 통계에 보험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의 가계대출이 제외된 관행을 개선해 올해 2분기부터 해당 항목을 포함한 신계열 통계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원이 금융상품 강요하면 형사처벌"

금융위 '약탈적 대출' 징계 도입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에 대한 징계가 도입된다.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속칭 '꺾기')을 강요한 은행원과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종용한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약탈적 대출 금지... "무분별 가계대출 억제"=금융위는 금융상품 종류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

는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변제계획을 파악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 김홍식 금융소비자과장은 "대출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빚을 미구나 권해 이자를 칭가는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성 상품의 금액·만기·용도 등에 따라 구체적 확인 사항은 차별을 두기로 했다. 약탈적 대출이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가 내려진다.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은행, 금융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중개·대리업자(보험 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가 징계 대상이다.

◇관행 극복 위해 협시처벌=금융위는 '꺾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출 담당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홍식 과장은 "금융감 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가 내려진다.

금융위는 "금융감 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가 내려진다."

금융위는 "금융감 독원 검